

뉴스현장에서 바라본 재난 보도



글. 박철홍
연합뉴스 광주전남취재본부 기자

“지금 속보 떴어.”

침몰하던 세월호에서 승객이 보낸 한 줄의 메시지가 현장에 있던 기자에게 참 아프게 다가온다. “조금만 빨랐더라면...”, “구명조끼 입고 탈출해야 한다는 속보를 띄웠더라면...”. 비록 결과론적이지만 뒤늦은 후회가 밤잠을 설치게 한다.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 언론보도의 행태를 두고 비난이 많다. ‘전원구조’라는 해명조차 할 수 없는 오보, ‘사상 최대의 구조작전’이라는 사실이지만 진실은 아닌 기사가 실종자 가족은 물론 전 국민의 공분을 샀다. 첫날부터 40여 일 이상 머물며 사고해역, 팽목항, 체육관, 정부 브리핑 장소까지 여러 현장을 지킨 기자로서 실종자 가족과 국민에게 또 한 번의 좌절을 안긴 오보와 진실에 한 발짝 더 다가가지 못한 기사에 책임을 느낀다. 그러나 ‘속보보다는 정확성’, ‘특종보다는 인격권보호’로 귀결되



실종자 가족들이 머무는 진도군 팽목항(연합뉴스 제공, 「세월호참사」 안개 낀 팽목항 하늘, 2014년 5월 22일자)



세월호 침몰 당시 구조되는 학생들(연합뉴스 제공, 「〈여객선침몰〉 구조된 학생들」, 2014년 4월 16일자)

는 외부의 쓴소리에 쉽사리 고개가 끄덕여지지 않은 것은 신속한 한 줄의 기사가 소중한 생명을 한 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뒤늦은 후회 탓이다. 현장에서 급박한 상황 속에서 매번 딜레마에 시달리는 기자들에게 선언적 의미에 그치는 재난보도준칙의 재확인보다는 언론사를 비롯한 일선 기자들의 혼련과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혼란, 분노…사실, 진실

16일 오전 사고발생 소식을 듣고 도착한 팽목항은 아수라장이었다. 비교적 이른 시간에 현장에 도착한 덕분에 첫 구조선에서 내리는 승객들을 인터뷰하고, 사진·영상 취재를 할 수 있었다.

물에 흠뻑 젖은 남학생에게 마이크와 수첩을 들이밀며 물었다. “사고 당시 상황이 어땠나?”, “배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나?”

“잘 모르겠어요. 팽하는 소리도 들렸고… 선내방송으로는 계속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라는 방송이 나왔어요”, “아직 배 안에 사람들이 많이 남아있었는데… 계속 움직이지 말라고 방송하고….” 단원고 학생은 말을 잇지 못하고 울먹였다. 그 순간 ‘전원구조’라는 속보가 올랐다. 당황스러운 마음에 전화기를 붙잡고 소리쳤다.

“아직 사람들 많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전원구조 아닙니다.”

혼란이 분노로 바뀌는 건 순식간이었다. 실종자 가족과 자원봉사자보다 더 많은 숫자의 국내의 취재진이 좁은 팽목항에 몰리면서 혼란은 더 가중됐다. 작은 소란과 목소리에도 수십여 대의 카메라가 몰려들었고, 참다못한 실종자 가족은 현장 기자들에게 비난을 쏟아냈다. 몰려든 언론사들의 경쟁은 남을 밟고 올라서려는 선동으로 변질됐고, 팽목항에서 기자들은 스스로의 과오로 설 자리를 잃어갔다. 실종자 가족인 척하거나 그들의 편에 선 듯 행세하던 기자들은 다시금 ‘음모론’을 ‘의혹’으로 포장해 보도하다 시간의 흐름이 드러내 준 진실에 다시 내쫓기듯 현장을 떠났다. 급박한 상황에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내보낸 ‘전원구조’의 오보는 현장 기자들의 ‘자격지심’을 심어 줬다. “빨리 쓰기보다는 정확히 쓰라”는 각 언론사 내부 지침에 정부 당국의 입에 의존하는 보도가 쏟아졌다.

당연한 귀결로 이번에는 ‘사상 최대 수색’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공분을 샀다. 이후 사실이 아닌

진실을 보도해야 한다는 자성과 희생자와 실종자 가족의 인격권을 위해 무분별한 취재를 자제하자는 움직임이 일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카메라가 내동댕이쳐졌고, 기자의 휴대전화가 바다에 내던져졌다. 그러나 부서지는 건 취재장비가 아니라 기자들의 마음과 자존심이었다.



탐승한 승객 중 구조된 승객이 배에서 내리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여객선침몰〉 구조되는 세월호 탑승자들」, 2014년 4월 16일자)

인격권 보호 뒤에 숨은 권력

세월호 침몰과 관련한 주요한 팩

트는 대부분 현장에서 취재됐다. 사고 초기 구조자들을 인터뷰해 얻은 팩트는 확인에 확인을 거쳐 ‘변침(방향선회), 고박장치 부실 등 사고원인’, ‘승객을 버려두고 탈출한 선장’, ‘혼자 남게 된 6살 여자아이의 사연’ 등 수많은 기사가 구조자들을 상대로 한 인터뷰를 통해 세상에 드러나게 됐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사고 피해자들의 인격권이 침해되거나, 원하지 않은 모습과 목소리가 동의 없이 광범위하게 기사로 유통돼 혼란을 주기도 했다. 중요한 것은 실종자들을 신속히 구조하는 것과 사고원인·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혀 다시는 이 같은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으나 현장에서는 이러한 원칙은 무시되기 일쑤였다. 현장의 기자들은 인격권 보호와 취재 사이에서 방황하다 자의 반 타의 반 실종자 가족이 원하지 않는 취재나 보도는 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 됐다. 그러자 이제는 범정부사고대책본부 등 정부 당국이 실종자 가족의 뒤에 숨었다. 공식 브리핑에서는 ‘최대 인원·장비 투입’이라는 판에 박힌 내용만 반복됐고, 그나마 새로운 사실을 취재할 수 있는 팽목항 실종자 가족 대상 브리핑은 “가족들이 원치 않는다”는 명분으로 기자들 접근을 막았다.

사고해역에서 잠수사가 제대로 투입되는지 살피는 취재진을 해경 경비정이 몰아내는 일도 다반사로 발생했다. 사실은 취재할 수 있었지만, 진실은 취재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자 구조·수색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는 정부 관계자의 입을 통해서만 파악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그 가운데 온갖 음모론과 의혹이 수색을 더디게 했다. 일부 민간잠수사는 언딘과 해경이 잠수 참여를 막는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다이빙 벨은 구원의 종인 양 호들갑을 떨다 헤프닝만 남기고 사라졌다. 언론이 진실에 좀 더 접근하려 했다면, 실종자 가족의 인격권 보호를 명분으로 관계 당국이 언론을 피해 뒤에 숨지만 앓았다면 수색을 더디게 한 이러한 의심과 논란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현장과 데스크의 괴리

시간이 지난 뒤 현장의 기자들이 가장 많이 제기한 불만의 대상은 비협조적인 대책본부 관계자나, 기자들에게 적대적인 실종자 가족도 아닌 자사의 데스크들이었다. 상당수의 기자가 이른바 ‘이야기되는 기사’를 물어오라고 지시하는 데스크들의 지시로 현장에서 원하지 않는 취재를, 실종자 가족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기사를, 음모론을 의혹으로 포장하는 방송을 만들었다고 토로하고 있다.

실제로 ‘사상 최대 구조작전’이라는 제목으로 비난을 받은 연합뉴스의 기사의 경우 원래 제목은 ‘소조기 마지막 날 3, 4층 집중 수색...사망자 171명’이라는 팩트에 근거한 제목이었다. 현장에서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데스크의 조그마한 팩트 비틀기가 진실과 떨어진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제목이 과장돼 나간 기사는 르포, 분석 기사 등 실제적 진실에 다가가려고 노력한 자사의 다른 기사까지 도매금으로 매도당하게 했다.

반면에 현장에서 데스크의 중요성을 절감하기도 한다. 필자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확인하라는 데스크 지시에 오보를 몇 차례 피하기도 했고, 여러 사진과 함께 섞여 송고된 희생자의 시신 사진이 데스크 과정에서 걸려져 실종자 가족 가슴에 생채기를 내는 일도 면할 수 있었다.

현장 기자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데스크 급 기자들의 취재윤리와 재난보도준칙의 인식·적용이 대형재난사고 발생 시 반복되는 ‘언론불신’을 피하는데 무엇보다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언론사 간에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해야 할 취재’와 ‘쓰지 말아야 할 기사’의 선을 현장의 기자들에게 명확히 인식시켜주는 역할이 데스크에게 요구된다.

몸에 뺨 취재윤리

필자는 언론사 입사 시험을 준비하던 시절 재난보도준칙을 몇 차례 반복해 읽어본 적이 있다. 물론 언론사 입사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행동이었지만, 단지 읽어 숙지한 준칙은 매우 급하고 당황스러운 상황일수록 몸에 배어 튀어나왔다. 또 다른 사건·사고 기사를 쓰며 독자나 당사자에게 인격권 침해로 항의받은 경험이 무의식적인 취재윤리를 몸에 배게 했다. 동의를 얻지 않으면 익명으로 하거나, 사진은 뒷모습이나 모자이크를 해 내보냈고, 기사가 당사자에게 끼칠 영향을 항상 의식하면서 기사를 썼다.

일각에서는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 반복된 언론불신 상황을 피하기 위해 취재보도 준칙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진다. 그러나 신속성과 정확성을 둘 다 충족해야 하면서 취재원의 인격권까지 보호할 황금률은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기자가 재난보도 현장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도 몸에 뺨 만큼 숙지하고 훈련하는 일 그것만이라도 제대로 된다면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 발생한 언론불신은 조금이나마 줄어들었을 것이다. 재난보도의 기준을 마련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에 맞게 훈련과 실천을 하는 일도 절실하다.